

보도시점 2026. 7. 2.(목) 15:00 (국제엠바고) 배포 2026. 7. 2.(목) 1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OECD*는 7.2(목) 현지시간 08:00(한국시간 15:00),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①미래 대비 거시정책, ②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③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④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 발표

OECD는 우리 경제가 '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 삶의 질 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26년 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간소비, 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 중동전쟁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축소 기대

다만 OECD는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지원하되 고령화에 대응하여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장기 지속 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재정목표 및 지출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 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 형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세제개혁 관련해서는 간접세·교정세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 전환, 부동산 과세의 보유세 전환 등을 제안했다.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서 초·중등 교육 자원 재배치와 고등교육 자금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권고했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지역 집중 투자, 지역대학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조성중 (044-215-2730)
			사무관	조선희 (044-215-2734)
			사무관	전예지 (044-215-2732)

참 고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보고서 원문은 OECD 홈페이지(<http://oecd.org>)를 참고하기 바라며,
한글 보도자료와 원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문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

1) 미래 대비 거시정책(Future-proofing macroeconomic policies)

- ◇ '96년 OECD 가입 後 30년간 소득·삶의 질 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저출생·고령화 등 도전과제 상존 → 구조적 대응 강화 필요
- ◇ 중동전쟁에도 신속한 정부정책, 반도체 호조 등으로 성장세 확대 →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 통화정책은 장기 인플레이 기대심리 안정 중점

1. 경제동향 및 전망

- (경기) 계엄, 중동전쟁에도 정부정책, 반도체 호조 등으로 회복세
 - '25년 계엄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확장재정 등으로 회복, 특히 소비쿠폰은 소비·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important boost)
 - '26년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세 보이던 중 중동전쟁 발발했으나,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로 부정적 영향 축소 기대
 - 다만,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 수반하고 인센티브 왜곡 가능,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

⇒ 에너지 위기 지속시 취약 계층 가구,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 우선,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 폐지(phasing out)

- (물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물가상승 예상되나 국내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비교적 크지 않은 상황

⇒ 통화정책은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일시적 물가상승 압력보다 장기 인플레이 기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대비

※ Look through inflationary pressures from the energy price shock, while standing ready to tighten to keep long-term inflation expectations anchored

- **(전망)** '26년 성장률 2.6%, 물가 2.6% + '27년 성장률 1.9%, 물가 2.2%
 - 소비는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 재정 지원 등으로 점진적 회복세, 투자는 전쟁 불확실성으로 단기 위축 예상되나, '26년 하반기엔 반등
 -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에 기여, 중기적으로 성장기여도는 둔화

2. 정책과제

- **(재정)** 내수 보완 위한 재정정책 지속하되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필요

⇒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필요(consolidate in the medium term)

⇒ 장기 지속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 재정목표 및 지출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 필요

⇒ '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금 납입 연령과 연계하여 상향,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수급·납입 연령 연계

- **(거시건전성)** LTV 등 대출규제 강화조치는 주택가격·가계부채 억제에 기여, 현재의 주택시장 압력 완화시 상환능력에 기반한 체계로 재검토 필요
 - 정부의 서울 중심 주택공급 노력은 수급불균형 해소에 유망(promising), 다만 주택 개발의 긴 시간 소요로 효과 점진적 → 수요 측면 정책도 강화

⇒ 개발제한 완화, 계획·승인 기간 단축, PF 거버넌스 개선 및 입지 우수지역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 **(무역·외투)** 대외개방은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 무역다변화 및 외투촉진 중요
 - 對美(^{25년}17%), 對中(18%) 수출 집중도, 글로벌 가치사슬 노출·영향 높음
 -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 외투유치에 효과적
 - 공공청렴 지표(Public Integrity Indicators)에서 OECD 평균 이상 기록중이나 로비 활동 투명성 등 일부 지표는 평균 하회

⇒ 다자 및 양자 간 무역 협정 확대 및 고도화 지속

⇒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 고려

2)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Tax reform for growth and revenue)

- ◇ 고령화 관련 지출 압박 증가, 現 세수 구조는 왜곡 적은 간접세·교정세 등 비중 낮은 편, 조세지출로 인해 직접세 수입 감소
- ◇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추가세수 확보 필요, 이를 위해 부가세·교정세 우선 활용

1. 법인세

-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은 법인세수의 15.5%(전체 조세지출의 17.8%),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OECD 국가 대비 복잡한 측면*

* OECD 회원국 중 22개국 단일세율, 12개국 2단계 누진구조, 3단계 이상은 한국 포함 4개국

⇒ 조세지출을 축소하며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

2. 소득세

- 근로자 32.5%가 비과세 대상, 주식 등 자본이득은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대주주만 적용)

⇒ 조세지출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 확대, 비과세 근로자 축소

⇒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한 균일 과세 지향

3. 소비세

- (부가세) 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한국 10%, OECD 평균 19.3%), GDP 대비 세수도 OECD 대비 낮은 편

- 간이과세(세부담↓)는 '24년 매출액 기준 상향 등으로 대상자 확대, 저가 수입품(150달러 미만)에 대해 면세 중 → 낮은 세수에 일부 영향

⇒ 간이과세 적용범위, 저가 수입품 면세범위 축소 → 과세 기반 확대

- (교정세) 담배세는 OECD 대비 소매가 및 세금부담이 낮은 편이며, 주류세는 외부성 요인(알코올 소비량)에 대한 과세 연관성 미흡

⇒ 담배세 인상,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 기준 부과

4. 환경세

-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무상할당 비중이 높고 시장 유동성 부족

⇒ 배출권거래제의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비중 확대

5. 재산세

- (부동산세) 부동산 세수가 OECD 대비 높은 편이나*, 왜곡이 적은 보유세 비중은 낮은 편** (거래세 비중 ↑)

* 부동산세/GDP: (한국)3.0% (OECD 평균)1.6% / ** 보유세/부동산세수: (한국)29.4% (OECD 평균)56.0%

⇒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

⇒ 장기적으로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거주형태 중립성(tenure neutrality) 확대(공실, 세컨드홈 등 활용도 낮은 자산은 더 높은 세율 적용)

- (상속세) 가업승계 제도가 조세 회피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 제기,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수혜자가 아닌 상속 자산에 상속세 부과

⇒ 가업승계 제도 재검토 및 상속세 회피에 악용되는 허점 보완

⇒ 상속세 제도의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검토 필요

3)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Smarting up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 ◇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 하락 → 교육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긴요하나 성인의 기술수준이 OECD 평균 하회, 연령 증가에 따라 급속히 저하
- ◇ 공교육 강화, 대학교육의 질 제고, 직장내 평생학습 촉진 등 권고

1. 교육체계 개편

- 대학입시를 위한 집중과외 등 경쟁 심화,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배양 미흡 → 성인이 된 이후의 지속적인 학습 기반 부족

- 고등교육 이수율이 71%에 달하나 학위 과잉 공급, 고등교육의 질적 문제로 청년고용 어려움 지속,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 프리미엄 하락

* 고등교육의 질적 문제는 자금지원 부족(공적지원 부족 + 등록금 인상 제한)과 연관될 가능성

- ⇒ 학교내 돌봄서비스 지속 확대·개선 폭넓은 관심사 반영한 주제 구성
- ⇒ 기존 교과에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 통합
- ⇒ 모든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반영하는 입학 절차 강화
- ⇒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 허용 및 초·중등 세수 배정 점진적 축소

2. 평생학습 촉진

□ OECD 국가들에 비해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낮은 수준

- * 근로자 중 한달에 한번 이상 실무교육(learning by doing) 참여비율은 한국 약 50%, OECD 평균 70% 상회, 근로자중 12개월내 교육훈련 참여비율은 OECD 국가중 최하위

-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공급 중심 임금체제로 인한 조기퇴직 관행 등 노동시장 구조가 기업의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 제공 인센티브 저해

□ 평생학습 활성화 위해 지역별·산업별 지원체계 조율 필요

- ⇒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 직장내 차별에 대한 제재와 노동 감독기관의 후속조치 역량 강화
- ⇒ 차별적 임금 관행 파악·축소 위해 상세한 성별 임금 격차 보고, 동일 임금 감사를 포함한 의무적 임금 투명성 조치 시행
- ⇒ 임금을 직무특성·성과와 연계, 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부문별 협약모델 시행, 기업별 의무 퇴직연령 폐지 또는 퇴직연령 단계적 상향
- ⇒ 공공부문에서 비판적 사고 명시적 보상,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의미있는 책임 위임시 보상하여 민간부문에 성공적 모델 제시
- ⇒ 실습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장려 위해 기술 투자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더 많은 사회 파트너 포함
-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위한 권한 확대, 지방 평생교육위원회와의 협의 통합·발전

4)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Reshaping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 ◇ 수도권은 경제적 기회, 고품질 서비스, 일자리 집중으로 인구 쏠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재정능력 약화에 직면
- ◇ 지역균형성장 위해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거점 활성화 및 토지계획·주택정책 전면적 개편 권고

1.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규제, 공공재정 등 각종 제도적 여건이 공간적 격차 심화

- 교육·의료·교통 등 필수 서비스가 지역간 불균등하게 제공
- 지방정부는 광범위한 지출 책임과 제한된 재정 자율성 간 불일치에 직면, 과세 권한이 적고 재정 이전에 크게 의존

⇒ 의료서비스 부족지역에서 1차·필수 의료 제공시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

⇒ 전문서비스 장벽 완화(다분야 업무 수행 허용, 최저 수수료 폐지, 진입 규정 재구조화)

⇒ 혁신 친화적 메커니즘(상용화 전 조달, 디자인 공모전, 경쟁적 대화, 혁신 파트너십, 성과 기반 계약 등) 도입하여 조달제도 현대화

⇒ 주요 법률 입법시 의무적 규제영향평가, 이해관계자와의 체계적 협의 확대

⇒ 지방정부의 과세권과 교통·장기요양·주거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지출 자율성 확대

⇒ 재정균등화제도는 무조건부·산식기반 균등화 보조금으로 재정립, 목적보조금과 매칭보조금은 국가적 우선 과제로 범위 축소

⇒ 정부 간 재정 이전에 대한 정기적·독립적 평가 실시

⇒ 부처간·지방정부간 협력과 지역 거버넌스 강화, 재정균등화 및 공공투자 결정 위해 인구통계학적 전망 체계적 활용

2. 지역거점 활성화

□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낙후지역 대상 재분배적 투자, 혁신 도시 접근법을 거쳐 현재 지역 주도형, 장소 기반 개발로 전환

○ 다만, 명확한 지역거점 없으면 자원 분산 규모의 경제 효과 희석 우려

- ⇒ 인프라 투자는 기능적 거점지역에 집중, 거점도시-배후지역간 네트워크 기반 연계발전 강화
- ⇒ RISE 프레임워크 활용으로 중등·고등·직업 교육 과정을 지역 경제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기반 통합적 기술 생태계 구축
- ⇒ 서울 소재 대학의 경직된 입학정원 상한제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대체, 엄격한 품질 기준 적용하는 방안 검토
- ⇒ 비수도권 거점도시 내 주요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
- ⇒ 숙련된 이민자 통한 지역의 노동공급 확대 위해,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절차 간소화 및 자격요건 완화, 직업교육 경로 및 고용주와의 협력 확대
- ⇒ 경제자유구역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중심 재편
- ⇒ 규제자유특구는 명확한 평가기준, 종료전략, 확대방안 도입
- ⇒ 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은 쇠퇴하는 경제활동에의 고착화 방지 위해 구체적·한시적으로 설정

3. 토지계획 및 주택정책 개편

□ 한국의 토지이용 체계는 중앙집권적·계층적 계획 기반으로 운영 →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간 격차 확대 상황에서 구조적 자원배분 왜곡 우려

○ 적절하게 설계된 저렴한 주택 확보, 공공주택 입주 유인 제고 필요

- ⇒ 정부 각급의 책임 명확화, 지방정부에 더 큰 규제 유연성 부여하여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 ⇒ 지방정부의 구역 지정·개발 권한 강화, 토지가치 회수제도 설계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수익의 더 큰 비중을 보유·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 공공주택 프로젝트 수립시 일자리·서비스접근성 고려, 지역의 인구 통계학적 수요 충족하여 설계 다양화